

한국경제학회 발표자료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Fiscal Trilemma)

2019. 3.27

류 덕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재정정책의 제약조건과 재정지출 현황

III.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Fiscal Trilemma)

IV. 재정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V. 맺음말

I. 문제제기

-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정책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제약조건1)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음
 - (제약조건2)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임
 - (제약조건3)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크며 세대별/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
 - (제약조건4)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고착되어 하위 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 (소득불평등성 확대)
 - (제약조건5) 통일준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한국은 지난 시기에 3번의 큰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
 - (경제위기1) 1979~80년 위기: 재정안정화 정책 수행
 - (경제위기2) 1997~98년 IMF 외환위기: 대규모 공적자금(국가채무) 투입
 - (경제위기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적극적 재정정책
 - 이 모든 경제위기에 재정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위기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현재는 과거의 경제위기에 준하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기침체의 시작,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창출 저하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어 재정을 통한(as usual!)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짐

□ 주요 정책과제별 이슈

- 분야별 자원배분의 방향성 문제
-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 재정건전화 관련
- 재정개혁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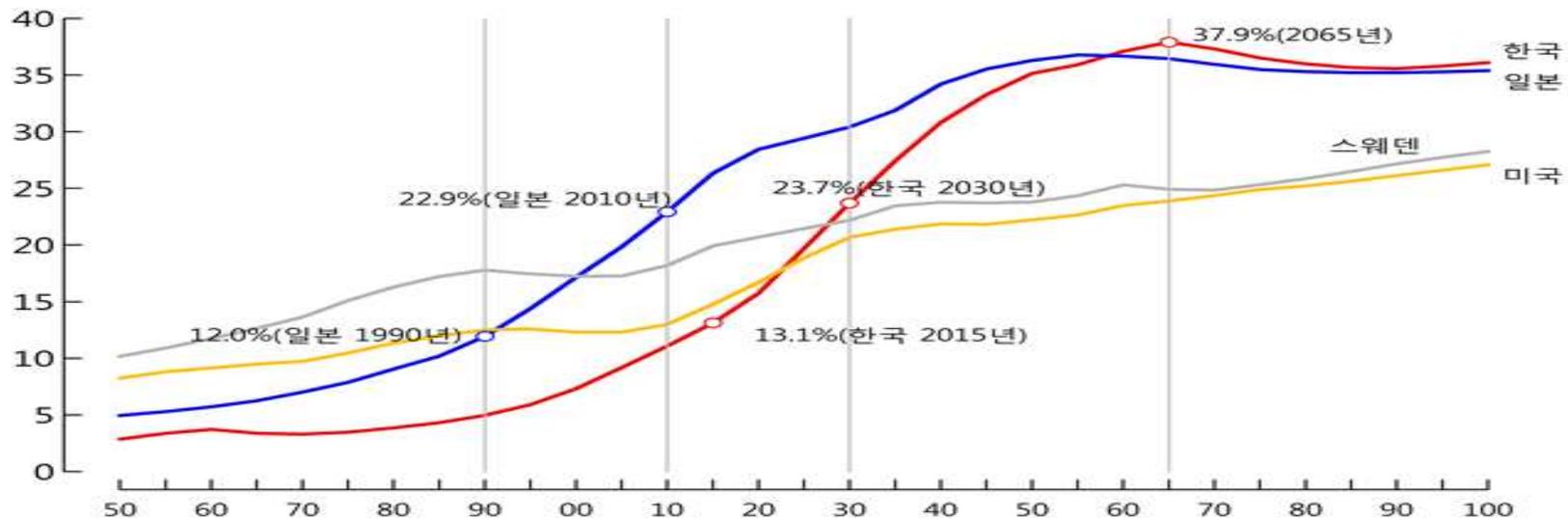
□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 재정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부문 개혁방안

II. 재정정책의 제약조건과 재정지출현황

1) 재정정책 제약조건

○ (제약조건1)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



자료: 김정훈(2018).

<표 1> 한국과 일본의 재정비교 (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복지지출
일본 (1990-94)	-1.3	70.9	19.9	32.7	12.8
한국 (2010-14)	0.6	33.8	18.2	31.9	9.6
일본 (2010-14)	-7.8	212.9	17.0	41.8	22.4

주: 복지지출은 OECD 일반정부 기준인 SOCX를 의미함.

자료: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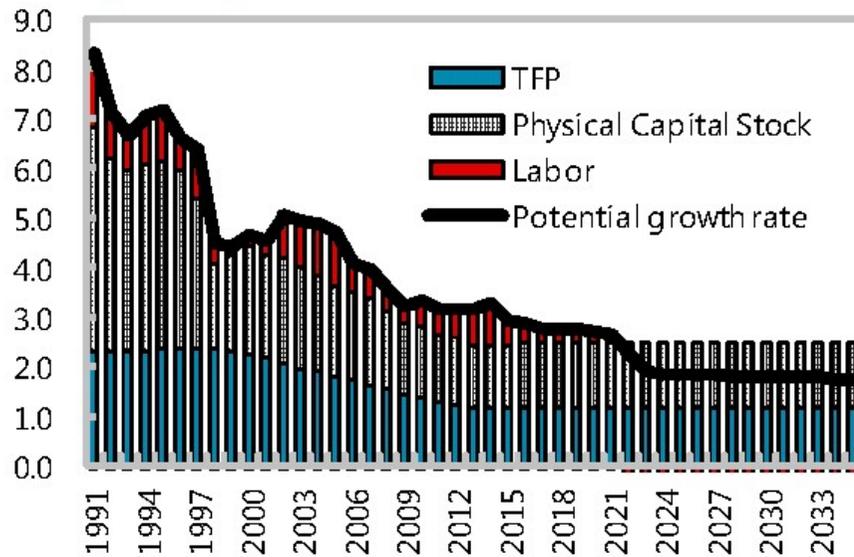
○ (제약조건2) 성장잠재력 약화

<표 2> OECD 국가의 중·장기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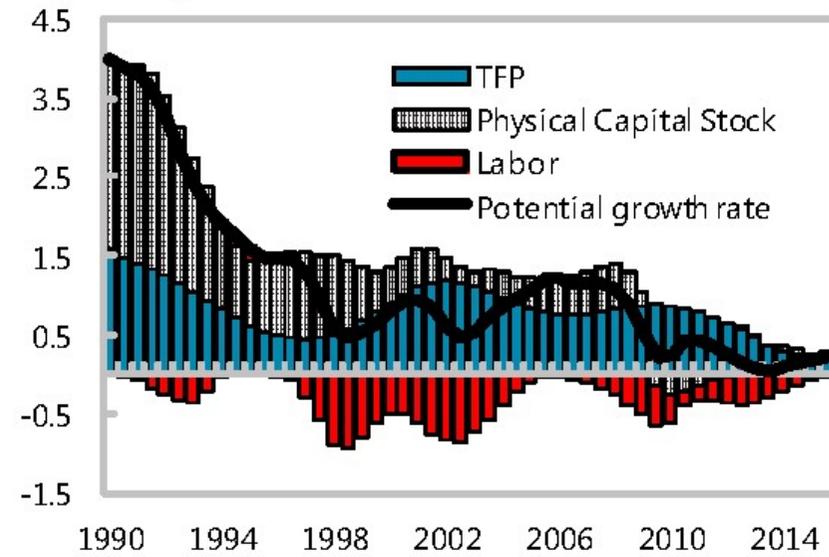
유형	국가	GDP				1인당 GDP			
		'95~'11	'11~'30	'30~'60	'11~'60	'95~'11	'11~'30	'30~'60	'11~'60
저 국민부담률 국가	미국	2.5	2.3	2.0	2.1	1.5	1.5	1.5	1.5
	스위스	1.7	2.2	2.0	2.1	1.0	1.5	1.8	1.7
	호주	3.3	3.1	2.2	2.6	1.9	2.0	1.7	1.8
중 국민부담률 국가	영국	2.3	1.9	2.2	2.1	1.9	1.3	1.8	1.6
	캐나다	2.6	2.1	2.3	2.2	1.6	1.3	1.8	1.6
	네덜란드	2.2	1.8	1.6	1.7	1.7	1.5	1.7	1.6
고 국민부담률 국가	스웨덴	2.5	2.4	1.8	2.0	2.1	1.7	1.5	1.6
	덴마크	1.5	1.3	2.1	1.8	1.1	1.0	2.0	1.6
	독일	1.4	1.3	1.0	1.1	1.4	1.5	1.5	1.5
	오스트리아	2.0	1.5	1.4	1.4	1.7	1.2	1.4	1.3
남유럽 국가	이탈리아	1.0	1.3	1.5	1.4	0.6	0.9	1.5	1.3
	스페인	2.9	2	1.4	1.7	1.9	1.6	1.3	1.4
	포르투갈	1.7	1.4	1.4	1.4	1.3	1.4	1.6	1.5
	그리스	2.4	1.8	1.2	1.4	1.9	1.7	1.3	1.4
	한국	4.6	2.7	1.0	1.6	4.0	2.5	1.4	1.8
	일본	0.9	1.2	1.4	1.3	0.8	1.4	1.9	1.7

-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원천 별 비교: 고령화율로 비교할 때 현재의 한국은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비슷.
- 향후 노동투입에 의한 성장기여는 0 혹은 (-)로 될 가능성이 큼.

Korea: Potential Growth Rate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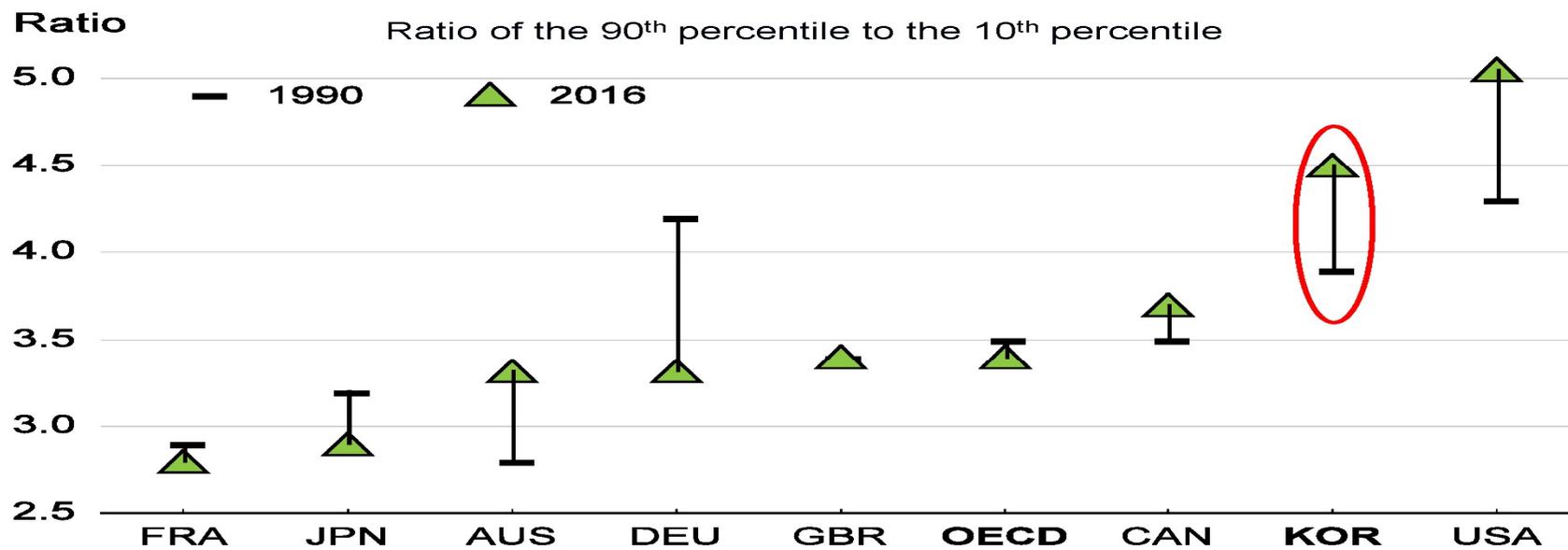
Japan: Potential Growth rate (Percent)



자료: IMF(2017).

- **(제약조건3)**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크며 세대별/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인구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지출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 「2018~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총지출은 연평균 7.3%씩 증가하나 보건/복지/고용 부문 지출은 연평균 10.3%씩 증가

- **(제약조건4)**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고착되어 하위 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임금 10분위 배율의 경우, 한국의 소득 불평도가 OECD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



자료: 김정훈(2018).

- **(제약조건5)** 통일준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통일부(2011)에 따르면 단기, 중기, 장기형 통일형태에 따라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 GDP의 1.3~6.0%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

2) 재정지출 현황

□ 주요쟁점

- 국제비교와 관련하여 한국의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경제분야 축소 및 사회복지장 복지 분야 지출비중을 늘리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다만 문제는 향후 5년 동안 복지분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에 달려 있음.
 -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비중은 총지출 대비 34%인 반면 OECD 국가는 약 50%임
 - 따라서 OECD의 약 68% 수준인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을 3년에 걸쳐 약 4%씩 늘릴 경우 2020년에 80%수준으로 늘어나며 이는 총지출 대비 40% 수준으로 증가함을 상정하고 있음

<표 4> 2018년 예산 및 20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배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A) 분야별 지출 (조원, %)						
총지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3
1. 보건·복지·고용	144.6	162.2	179	196.4	214.3	10.3
2. 교육	64.2	70.9	76	80.1	84	7.0
3. 문화·체육·관광	6.5	7.1	7.4	7.8	8	5.5
4. R&D	19.7	20.4	21.4	22.6	24	5.2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19.4	19.9	20.2	5.5
6. SOC	19	18.5	18	17.7	17.5	-2.0
7. 농림·수산·식품	19.7	19.9	19.8	19.7	19.6	-0.1
8. 환경	6.9	7.1	7	6.9	6.7	-0.5
9. 국방	43.2	46.7	49.9	52.8	55.5	6.5
10. 외교·통일	4.7	5.1	5.4	5.7	6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20	20.9	21.7	22.6	4.3
12. 일반·지방행정	69	77.9	84.1	89.2	94	8.0

(B) 분야별 배분 비중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비중
1.보건·복지·노동	33.7	34.5	35.5	36.6	37.8	35.6
2.교육	15.0	15.1	15.1	14.9	14.8	15.0
3.문화·체육·관광	1.5	1.5	1.5	1.5	1.4	1.5
4.환경	4.6	4.3	4.2	4.2	4.2	4.3
5.R&D	3.8	4.0	3.8	3.7	3.6	3.8
6.산업·중소기업·에너지	4.4	3.9	3.6	3.3	3.1	3.7
7.SOC	4.6	4.2	3.9	3.7	3.5	4.0
8.농림·수산·식품	1.6	1.5	1.4	1.3	1.2	1.4
9.국방	10.1	9.9	9.9	9.9	9.8	9.9
10.외교·통일	1.1	1.1	1.1	1.1	1.1	1.1
11.공공질서·안전	4.5	4.3	4.1	4.0	4.0	4.2
12.일반지방행정	16.1	16.6	16.7	16.6	16.6	16.5

□ 복지 (보건, 고용 포함) 지출의 재원배분 이슈

<표 6> 보건, 복지, 고용지출 재원배분 현황 (2019년 예산안 기준)

구 분	'18(억원)	비중(%)	'19안(억원)	비중(%)	비고
■ 기초생활보장	110,152	7.6	127,046	7.8	■ 의료급여 +6,390억원, 주거급여 +5,437억원
■ 취약계층지원	26,204	1.8	34,124	2.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86억원
■ 공적연금	478,007	33.1	509,831	31.4	■ 국민연금급여지급 +21,478억원
■ 보훈	55,256	3.8	55,478	3.4	■ 보상금 +706억원, 6.25 자녀수당 +250억원
■ 주택	233,870	16.2	262,329	16.2	■ 다가구매입임대(용자) 6,605억원
■ 사회복지일반	11,268	0.8	12,975	0.8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268억원
■ 아동·보육	64,625	4.5	78,578	4.8	■ 아동수당지급 +12,175억원
■ 노인	110,293	7.6	139,133	8.6	■ 기초연금지급 +23,718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7,371	0.5	10,182	0.6	■ 아이돌봄지원 +1,161억원, 한부모자녀 +1,151억원
■ 고용	166,983	11.5	198,670	12.2	■ 구직급여 +12,521억원
■ 노동	66,573	4.6	67,090	4.1	■ 산재보험급여 +353억원
■ 고용노동일반	4,548	0.3	5,485	0.3	■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805억원
■ 보건의료	24,129	1.7	25,689	1.6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477억원
■ 건강보험(정부지원)	82,167	5.7	90,187	5.6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7,000억원 등
■ 식약안전	4,719	0.3	5,008	0.3	■ 인건비 +51억원
합 계	1,446,166	100.0	1,621,808	100.0	12.1% 증가

○ 한국과 OECD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교 (2013년 기준)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합계
우리나라(A)	2.23	0.23	0.61	3.78	1.13	0.46	0.27	..	0.56	9.33
비율(A/B)	29%	24%	29%	63%	53%	95%	30%	..	109%	44%
OECD 평균(B)	7.70	0.97	2.11	5.97	2.14	0.49	0.91	0.35	0.52	21.12
OECD 최고	15.06	2.64	4.73	8.61	3.80	1.81	3.23	1.44	2.16	31.49
OECD 최저	1.58	0.02	0.06	2.76	0.44	0.00	0.00	0.00	0.10	7.35

자료: 박형수(2018).

○ 한국의 복지지출의 생애주기별 구성 (2016년 기준, 조원, %)

- 노인, 영유아에 지나치게 집중된 복지; 미래세대의 출산/보육/교육/일자리 부담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할 필요

	(인구 비중)	국가복지재정 (A+B+C)	(비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A)	(비중)	기타 분야 중 관련 지출 (B)	조세지출 (C)
영유아 (0~6세)	6.1%	5.7	3.6%	5.6	4.5%	0.1	0.0
아동청소년 (7~18세)	12.0%	1.5	1.0%	1.2	1.0%	0.3	0.0
청년 (19~39세)	28.9%	8.3	5.3%	2.7	2.2%	5.4	0.2
중장년 (40~64세)	39.4%	0.6	0.4%	0.3	0.2%	0.3	0.0
고령자 (65세이상)	13.5%	47.8	30.6%	47.1	38.1%	0.3	0.4
성인 일반 (19세 이상)	81.9%	60.7	38.8%	38.2	31.0%	5.3	17.2
전연령 (구분불가)		31.7	20.3%	28.4	23.0%	1.9	1.5
합계		156.3	100.0%	123.4	100.0%	13.5	19.4

자료: 박형수(2018).

Ⅲ.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Fiscal Trilemma)

- 최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인구고령화/저출산/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복지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지속, 청년실업 급증, 소상공인 업종 침체, 소득분배 악화 등 국민생활수준의 지속적 저하 등은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실정을 고려할 때 이 추세가 지속될 것임
 -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과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5>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부담수준 비교

(A) 복지지출 (GDP대비 비중 %)	
상위 30% (10개국)	France, Denmark, Belgium, Sweden, Finland, Austria, Italy, Germany, Spain, Portugal (평균 27.6%)
중위 40% (13개국)	Greece, Slovenia, Netherlands, Luxembourg, Hungary, United Kingdom, Norway, Poland, Japan, Ireland, New Zealand, Czech Republic, Switzerland, Slovak Republic (평균 21.3%)
하위 30% (10개국)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Iceland, Estonia, Israel, Turkey, Chile, Korea(한국 32위, 8.6%), Mexico(평균 14.0%)
(B) 국민부담률 (GDP대비 비중 %)	
상위 30%	Denmark, Sweden, Belgium, France, Finland, Austria, Norway, Italy, Hungary, Luxembourg (평균 42.0%)
중위 40%	Slovenia, Iceland, Netherlands, Germany, Czech Republic, United Kingdom, Spain, Poland, New Zealand, Israel, Greece, Canada(평균 33.9%)
하위 30%	Portugal, Estonia, Slovak Republic, Ireland, Australia, Japan, Switzerland, Turkey, United States, Korea (한국31위, 23.4%), Chile, Mexico (평균 26.5%)
(C) 조세부담률 (GDP대비 비중 %)	
상위 30%	Denmark, Sweden, Iceland, New Zealand, Norway, Finland, Belgium, Italy, Australia, Austria (평균 32.3%)
중위 40%	United Kingdom, Israel, Canada, Luxembourg, France, Hungary, Ireland, Portugal, Slovenia, Netherlands, Greece, Germany (평균 24.8%)
하위 30%	Spain, Poland, Estonia, Switzerland, Turkey, United States, Czech Republic, Chile, Korea(한국30위, 18.2%), Slovak Republic, Japan, Mexico (평균 18.9%)

(D) 요약

	복지지출 비율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OECD 중위 40%	21.3%	33.9%	24.8%
OECD 하위 30%	14.0%	26.5%	18.9%
한국	8.6%	23.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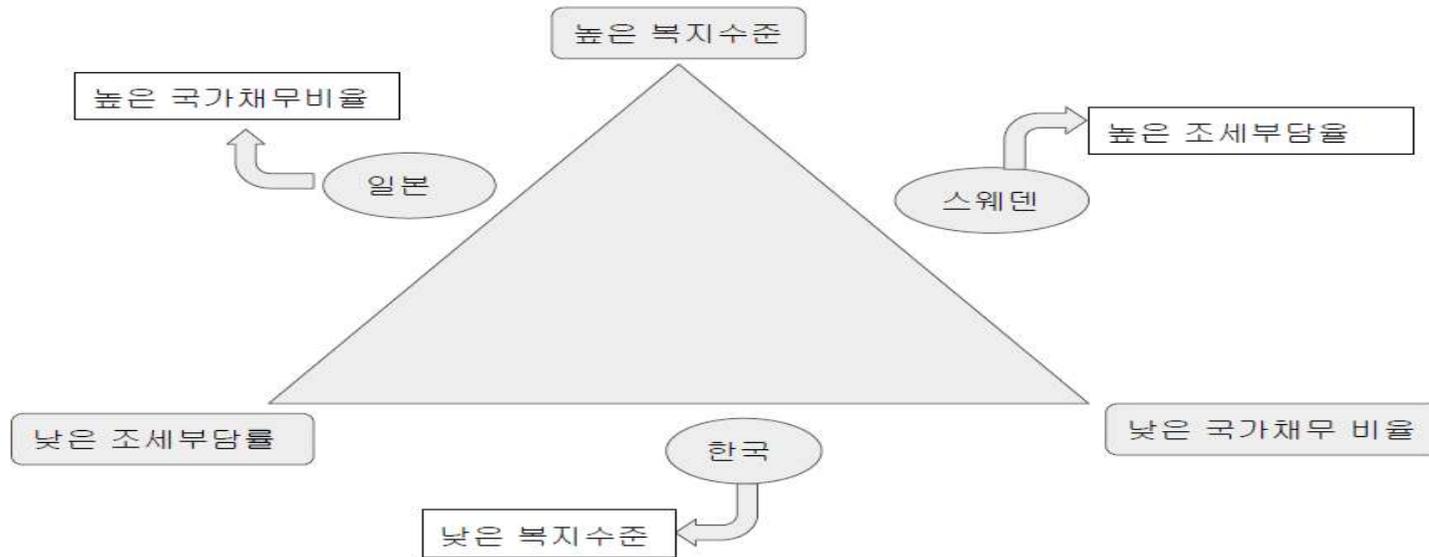
자료: 류덕현 (2017)

- 복지수준은 OECD 중위 국가의 경우 GDP 대비 21.3%, 한국 8.6%, 갭은 12.7%p
- (국민)부담수준은 OECD 중위 국가의 경우 GDP 대비 33.9%, 한국 23.4%, 갭은 10.5%p
- (조세)부담수준은 OECD 중위 국가의 경우 GDP 대비 24.8%, 한국 18.2%, 갭은 6.6%p

□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Fiscal Trilemma)

- 현재 고용 및 소득불평등 확대 등 민생경제 위기에 준하는 정책 과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정을 통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 복지지출의 증대와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는 과거 정부 때부터의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른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국은 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평등 완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정책우선순위로 둔다면 국가채무 증가 또는 조세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재정 트릴레마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

복지수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의 트릴레마 (Fiscal Trilemma)



	복지수준 (2016년)	조세부담률 (2016년)	국가채무 (2016년)
한국	(저) 10.4%	(저) 19.4% (26.2%)	(저) 43.7%
스웨덴	(고) 27.8%	(고) 34.1% (44.1%)	(저) 56.9%
일본	(고) 23.7%	(저) 18.6% (30.7%)	(고) 234.4%

자료: 기획재정부(2018).

OECD 국가의 재정트릴레마 (2016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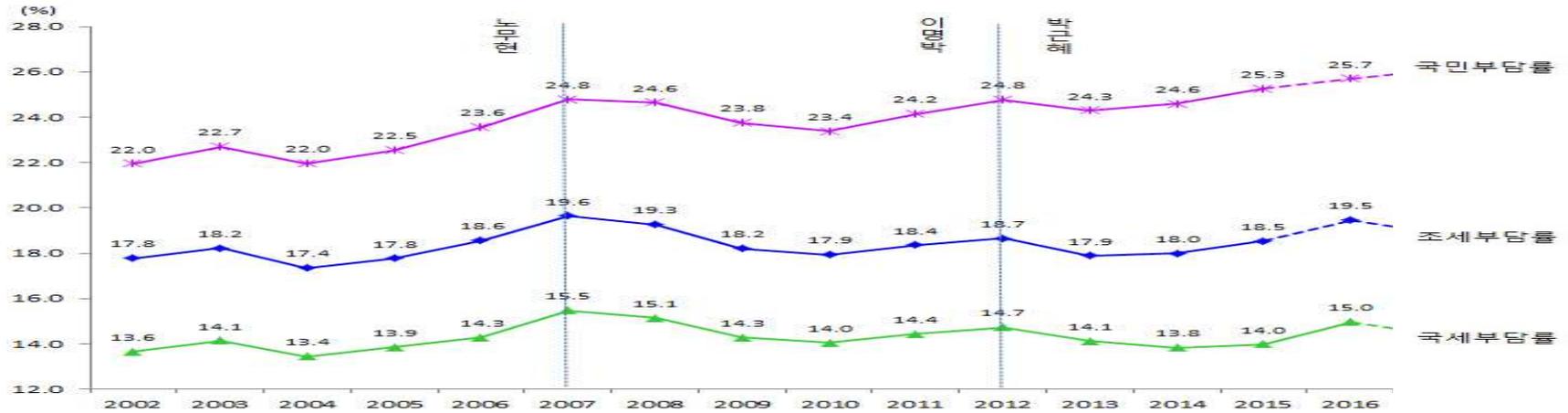
	복지수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율	국가채무
한국	10.4	19.4	26.2	43.7
일본	23.7	18.6	30.7	234.4
미국	19.3	19.8	26.0	138.5
영국	21.5	26.9	33.2	93.5
프랑스	31.5	28.5	45.3	109.2
이탈리아	28.9	29.9	42.9	132.0
독일	25.3	23.4	37.6	68.2
스웨덴	27.8	34.1	44.1	56.9
OECD 평균	21.0	25.0	34.3	83.4

자료: 기획재정부(2018).

□ 주요 쟁점

- 복지정책의 방향: 사회안전망을 확충과 제도 재설계 및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복지지출의 재원배분 중 많은 부분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사회복지의 영역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의 문제임
-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 수준이 낮고 지나치게 고령층 중심으로 청년층에 불리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나 미래대비 사회안전망 투자에 매우 취약
-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임. 가령 목표로 하는 부담율-국가채무비율의 조합과 결부하여 다양한 메뉴를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 역대 정부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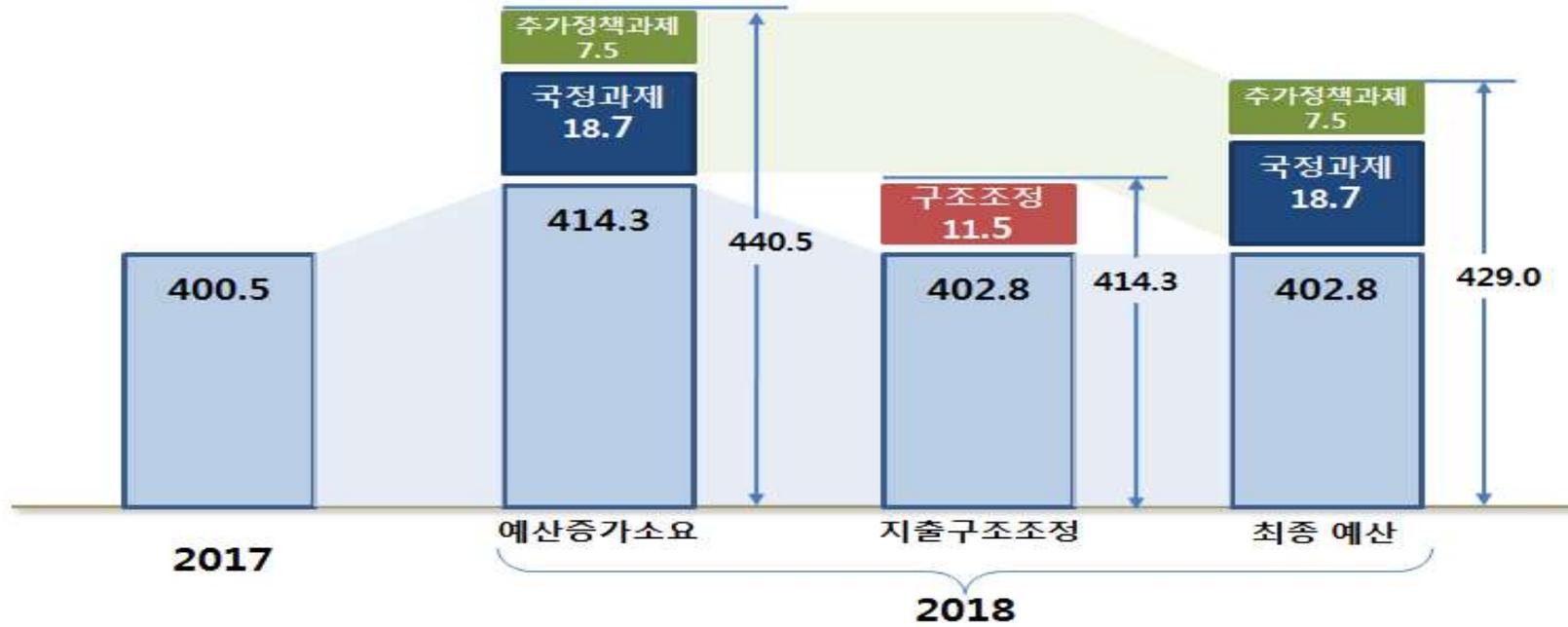


	국민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부담률
노무현 정부 (`02→`07)	22.0% → 24.8% (2.8%p)	4.2% → 5.1% (1.0%p)	17.8% → 19.6% (1.8%p)	13.6% → 15.5% (1.9%p)
이명박 정부 (`07→`12)	24.8% → 24.8% (0%p)	5.1% → 6.1% (1.0%p)	19.6% → 18.7% (△0.9%p)	15.5% → 14.7% (△0.8%p)
박근혜 정부 (`12→`16)	24.8% → 26.2% (1.4%p)	6.1% → 6.8% (0.7%p)	18.7% → 19.4% (0.7%p)	14.7% → 14.8% (0.1%p)
문재인 정부 (`17, 잠정)	26.9%	6.9%	20.0%	15.3%

IV. 재정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 과거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필요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들이 재정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지만 한계가 있음
 - 따라서 OECD 중위의 복지수준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담대한 국민부담률의 상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이러한 담대한 구상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묘안이 없으며 이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정치적 선택구조가 이를 결정할 것임.

[그림 7] 정부의 국정과제 자원 및 지출구조조정 (2018년 예시)



□ (포인트1)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전망 필요

○ 고령화 속도를 보면 2015년 경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8년 동안 복지지출 8%p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로 가령,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어떤 비율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 필요.

- 예시. 1%p 국민부담률 = 0.5%p 조세부담률 + 0.5%p 사회보장부담률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	복지수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1인당GDP (US \$)
한국 ¹⁾	2017=>2025	10.1	18.5	45.8	38,350
스웨덴	2017	26.7	33.6	51.7	50,179
일본	2006	18.1	17.1	161.8	33,103

주: 1) 한국의 2017년 고령화 비율은 14%임. 자료: 류덕현 (2018b).

□ (포인트2) 충분한 재정여력 (Fiscal Space)

- Fiscal Space: 재정여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과 현재 비율 간의 차이로 124%p를 초과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 Moody's (2014)에 따르면 한국은 Fiscal space가 241.1%로 팽창적 재정정책을 감수할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음.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은 재정여력이 0임.
- 최근의 조사에도 한국은 '상당한 정도'(substantial)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IMF (2018, 2019))

□ (포인트3) 재정부문 개혁 방안

-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2017년 기준 59.6조원)과 비과세 감면(2018년 41조원)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민부담 증대에 선행해서 추진해야 할 일
 - 튼튼하고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치로 재정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예산낭비 방지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아껴쓰고 잘쓰는’ 재정개혁이 선행된 후 증세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부의 보조금 개혁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보조금 존폐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존치평가를 강력하게 실행
 - * 보조금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보조금 일몰제, 사후 보조금 평가제도
 - 국고보조금에 대한 연도별 사업별 한도를 설정하는 국고보조금총량제를 실시할 필요도 있음
 - 비과세 감면도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제도를 뛰어넘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
 - * 법인세수 증대 논의 이전에 대기업 위주의 비과세감면 및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세부담 형평성 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포인트4) 정치적 합의와 협의, 그리고 책임!

- 현재의 상태는 총량-총괄적인 예산편성 등에 의한 경기활성화 대책 및 경제성장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총지출 증가율 9.7% 혹은 복지지출 비중 40% 등의 수치적 목표 혹은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집행 결과 향후 어떠한 사회경제 상태를 염두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집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
 - 예를 들면, 정책집행의 **targeting**을 정한 후 정책집행 결과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집행 규모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V. 맺음말

- 현재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협의의 재정정책(소득재분배, 경제성장,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음
 -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적자본 육성,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산업 노동시장, 서비스 분야 구조개혁 지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장개입 등 ‘쉽게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광의의 재정정책이 필요
 - 경제가 침체기를 겪을 때나 경제성장을 위한 담론에 항상 동원되는 ‘전가의 보도’는 재정 부문인데 재정의 등판시기를 선발-롱 릴리프-마무리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

- 재정을 통한 적극적 재정지출(단기 중기적으로!)은 아래 계층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음
 - ①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한 취약 계층,
 - ②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인계층,

- ③ 사회보장 · 사회보험 재정이 어려워지는 시점(30년 후)에 은퇴를 맞는 30세 이하 청년세대,
- ④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 및 비숙련 노동자 계층

□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지향수준을 OECD 중위국가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 ‘Big Push’ (매년 1%p 국민부담률 상향을 통한 10년간 10%p 증가와 같은)가 필요함

□ 재정개혁은 필수적임

- 재정총량 개혁: 일반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사회보장부문) 기준의 재정우선순위 설정
- 분야-부문별 개혁
- 재량-의무지출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 보조금(2018년 58조원) 개혁과 비과세감면(2018년 41조원)은 지속적으로 병행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6, 2016.

기획재정부,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보도자료. 2015.

기획재정부,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17a.

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2017b.

기획재정부,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 각 연도.

김정훈, 삶의 질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재정정책의 운용방향, mimeo, 2017.

박형수,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2018.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재정개혁반 발제자료, 2016.

류덕현,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국토연구』, 제73권, pp.83-97, 2012.

류덕현, 재정규모와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추정, 『재정학연구』, 9권 4호, pp.89-118, 2017.

류덕현,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재정개혁과 경제성장, 『재정학연구』, 11권 3호, pp.143-1759, 2018a.

류덕현,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2019 한국경제대전망』, pp.150-157, 2018b.

한중석, 재정정책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IMF, Korea' 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 s Experience, IMF working paper, 2017.

___, A New Strategy for Korea' s Fiscal Policy in a Low Growth Environment, 2018.

감사합니다 !